

-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

결 의 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 영토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사회편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겠다는 망언을 자행함으로써 이러한 망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512년) 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2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 대한 정면 도

전이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진리 속에서 또다시 패망의 길로 회귀하려는 몸부림과 다름 없음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150만 도민은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I. 독도는 역사적,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I. 일본정부와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 역사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거듭된 망언으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명백한 침략적 주권 침해 행위로서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단호한 응징을 촉구한다.

- I.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시키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 I.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의 고질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 I.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국제사회의 우호교류 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일본과는 향후, 어떠한 국제 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7. 21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